

##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 개선 계획 발표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KOTRA 등 13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제2차 중앙수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참석 기관들은 회의에서 수출증가세 회복을 위한 분위기 진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대책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산자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국내무역관이 공동으로 전국적인 수출비상지원네트워크를 구성, 수출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처리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계획을 2·4분기 내에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0년 현재 수출실적의 65.6%를 차지하는 무(無)신용장 방식의 선적전 신용보증을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무역금융의 신용보증한도를 현행 당기 매출액의 50% 수준에서 100% 범위로 확대하는 한편 보증료도 0.2P% 할인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출중소기업의 자금조달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지 정책을 입안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관련 대책을 현실화하는데 최종 목표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 부품소재 기술성 평가 결과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기술성평가 결과가 나왔다.

산업자원부는 2001년 제1차 부품·소재 기술성평가에서 신청 과제 264개중 86개과제(32.6%)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동안 151개 과제중 42개 과제가 통과했던 27.8%의 비율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이같은 실적향상은 작년들어 시작한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이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로부터 관심을 끌게됐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에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과제는 6월~7월중

부품·소재투자회의 사업성, 기업건전성 심사를 통해 투자를 받은 경우 정부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받아 기술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산자부는 또 올해 선정된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개발완료시 향후 3년까지 매분기별 기술개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기술자문을 실시할 방침이다.

산자부가 지난 5월 8일부터 18일까지 합속평가 위원제를 도입해 기술성평가를 한 것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평가위원의 73.0%, 과제 신청자의 74.1%가 평가백서 작성 등이 공정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초대 평가사업단장으로는 삼성종합기술원 임관 회장이 추대됐다.

한편 이번 기술성 평가 과제중 전기분야는 대용량 스위칭 부품과 전기자동차용 모터가 통과됐다.

## 지방 中企 해외전시회 지원 ‘절실’

영세 수출업체들이 정부의 수출지원 시책중에서 가장 목말라하는 것은 해외전시회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정부의 전시회지원이 서울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지방 중소기업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업자원부 수출입상황실은 무역협회 인천지부가 51개 관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인용, 중소수출업체들이 해외시장 개척부문에서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67%가 바이어 알선, 시장정보제공, 해외전시회참가 지원 등 시장 개척에 따른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해외 유명전시회 참가가 해외거래선 확보의 지름길이지만 자금역력이 없는 영세기업으로서는 참가 부담이 워낙 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무역협회 인천지부장은 “정부가 각종 전시회지원

을 대폭 늘린다고 했지만 영세기업은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떻게 한번 지원 받고 나면 추가 지원은 꿈도 못꾸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 동경 문구전시회와 화장품전시회 참가를 희망하고 있는 D사 및 B사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예산 규모가 적은 데다 국가지원은 서울업체에 집중되고 있어 지방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종합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실정을 털어냈다.

무역협회 인천지부는 이에 따라 지방수출업체에 대한 해외전시회 참여지원을 좀 더 강화해 줄 것을 산자부에 건의했다. 우선 지방 중소기업의 해외전시 참여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의 관련 예산을 별도 배정해 줄 것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일부 해외무역관이 전시지원 경비를 업계에 전가하는 것에 따른 업체 참가비 부담 가중을 해소시켜 달라는 것이다.

## 국산 부품소재 고장률 ‘0%’ 추진

산업자원부는 국산 부품소재의 고장률을 0%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올 부품소재 신뢰성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산자부가 마련한 신뢰성 향상 대책에 따르면 우선

기계류 등 7개 부품소재 분야에 총 300억원을 투입해 유압모터, 기어박스 등 42개 품목에 대한 신뢰성 평가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또 신뢰성평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8개 신뢰성평가기관, 부품소재 생산 수요기업 신뢰성평가 담당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훈련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신뢰성인증을 획득한 우수 부품소재가 시장에 쉽게 진출토록 하기 위해 조달청 및 공공투자기관에서 이들을 우선 구매하는 한편 정부지원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키로 했다. 아울러 구매기업이 자체 실시하는 입고검사를 신뢰성평가결과로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신

뢰성보험 공제제도를 도입해 구매기업이 마음놓고 부품소재를 사용토록 권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최저요율의 부품소재 보험공제 상품을 개발해 국내외 재보험사들과 재보험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 같은 계획이 성공을 거둘 경우 현재 약 1.5% 수준인 국산 부품소재의 고장율이 10년 내 선진국 수준인 0%대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선진국(100) 대비 65 수준인 신뢰성 수준도 2010년까지 95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 분야별 평가대상품목 현황

분 야		2000년	2001년	신뢰성평가기관
부 품	기 계 류	유압실린더, 공압실린더	기어박스, 변속기, 클러치, 유압모터, 오일펌프, 초음파부품, 방진마운트, 유압밸브, 공압밸브	기계연구원
	자 동 차	라디에이터 오일필터	속업소바, 와이퍼모터, ECU, 브레이크패드, 연료펌프	자동차부품연구원
	전 자	소형정밀모토, PCB 콘덴서, 릴레이	VCO, 바리스터, 인덕터, 커넥터, 튜너, 필터, LCD Backlight	전자부품연구원
	전 기	-	피뢰기, 폴리머애자, 2차전지, 고속전동기, 케이블, 건식변압기	전기연구원
소 재	기초금속	INVAR 합금	브레이징소재, 알루미늄출재, 금형용고속도강소재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가공금속	원심주조강판	천연가스수송용강판, 엔진벨브시트, 금형용가공부품소재, 내열소재, 전극재료	생산기술연구원
	화 학	o-ring	구조용접착제, 자동차용그리스, 자동차용냉각기호스	화학연구원
	섬 유	필터백미디어	에어필터, 자동차안전벨트요웨빙액체필터	생산기술연구원
합 계	11개 품목	42개 품목	-	



## 中企 정책자금 통폐합 추진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중복돼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현행 83개에서 70여개로 통폐합된다.

또 중소기업인들이 개별 기관을 방문해 별도의 구비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 정책자금 지원절차도 앞으로는 한 기관에만 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기관의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로 간소화된다.

기획예산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개편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런 계획을 확정,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유사자금들이 분산되고 지원조건도 달라 중소기업인들에게 혼선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용도가 유사하고 지원대상이 동일한 정책자금이나 한 부처 내에서 유사자금을 지나치게 세분화한 경우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통폐합안을 확정키로 했다.

대상은 환경부의 환경개선자금과 산자부의 환경설비투자자금, 중기청의 부품소재전문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산자부의 부품소재기술개발자금, 중기청의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자금과 산자부의 지식기반서비스업지원자금, 산자부의 가스유통구조개선자금 등 가스안전 관련자금 4개 등이다.

이와함께 지원절차 간소화 방침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소위원회 가동

제1차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대한 논의가 제1차 발전설비계획소위원회회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제1차 국가전력수급계획은 올해 말에 확정되며,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발전경쟁시대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장기전력수급계획이란 점에 전력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한전 본사 708호 회의실에서 산·

학·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발전설비계획소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 향후 10년이상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수립 작업에 들어갔다.

회의에서는 전력수급계획의 개념 규정과 소위 운영 방안에 대한 원칙적인 논의가 있었다.

산자부는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해 ▲발전설비계획소위 ▲수요예측소위 ▲계통계획소위 ▲총괄정책소위 등 총 4개 소위를 구성키로 했으며 이번에

구성된 발전설비계획소위에 이어 금명간 각 소위별로 10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이번에 구성된 4개 소위는 '99년 구성된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 9개 소위에 비해 대폭 축소·정예화된 것이다.

산자부는 또 전력수급계획을 심의할 전력정책심

의회를 상반기중에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와 한전은 지난 '91년부터 장기전력수급계획을 매 2년마다 수립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국가전력수급 계획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검토·수립한다.

## 중전기기·전선 작년비 26% 증가

올해 하반기에 정보기술(IT) 업종에 대한 설비투자 규모가 감소하는 반면 전통제조업의 설비투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자원부가 최근 매출액 기준 상위 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설비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설비투자는 27조8천318억원으로 지난해의 26조4천684억달러보다 5.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업종별로는 반도체(-4.8%)와 전자부품(-8.1%), 컴퓨터(-24.2%) 등 IT 업종의 투자는 위축된 반면 자동차(11.6%), 철강(55.2%), 조선(50.0%) 등 전통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전기기·전선 분야는 지난해 1천854억원보다 26.3% 증가한 2천341억원으로 설비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투자 유형별로는 설비확장이 53.5%로 가장 많았으며 설비 유지·보수가 14.8%, 신제품 연구개발 13.3%, 정보화 4.0%, 자동화 2.7%, 기타 11.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IT분야의 수요감소와 재고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관련업종의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며 "하지만 투자활성화 조치 등으로 인해 하반기 설비투자규모는 올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철도청 전철부품 일괄수주

철도청이 전기철도 부품 및 자재류 품질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한 극약처방안을 내놓았다.

철도청 전철전력과는 전차선의 전기장애나 사고발생이 주로 해당부품의 입찰가가 턱없이 낮은데서 비롯된 불량품과 부실시공에 근거한 때문이라고 판

단하고 기존 년입찰방식을 사업단위별 전체물량 일괄수주 방식으로 전환기로 했다.

철도청은 또 자재류 검사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금속 합금 비율, 장력, 강도, 도전을 시험 등을 철도 전문연구기관인 철도 기술



연구원에 시험을 거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철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차선 유지·보수 및 신규사업에 필요한 전기자재 및 부품의 경우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발주해왔는데 이 러다보니 해당 중소기업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낮은 단가로 입찰해 결과적으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철도청이 밝힌 최근 3년간 전철용품 전기기기의 단가별 표준가격과 입찰가격을 살펴보면 이같은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절연관의 경우 최근 3년간 표준가격은 25만원 이었으나 올해 실제 입찰가격은 이의 절반가격인 13만8,000원이었다.

단로기(36kV)의 경우도 표준가격은 36만8,000 원이었으나 입찰가격은 이의 절반도 안되는 14만 8,500원이었다.

결국 전문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전철 전기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소규모 년 계약 방식을 사업단위별 일괄수주로 바꿔야만 결과 적으로 전기장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철도청은 올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호남선과 경 부선전철의 유지·보수 필요기기를 정기계약방법에 의한 대량구매로 발주할 예정이다. 철도청은 제조원 가의 절감과 충분한 물량확보에 따른 제조공장 설비 의 현대화를 유도해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철도청 관계자는 “이번 전철 자재류 품질향상 대책을 통해 전기철도 부품의 품질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수제조회사를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조달청에 신기술인증을 취득한 업체 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